

# 오늘부터 21대 첫 국정감사...北-추미에-강경화 '3대 격전지'

### 외통위·국방위 격전 전망...증인 채택부터 '으르렁' 법사위선 '거짓 답변' 추미에에 野 용단폭격 예고 기재위, 재정건전성 화두...행안위, 보수집회 공방

21대 국회가 7일부터 '국회의 꽃'인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예년에 비해 축소된 국감이지만, 여야는 북한, 추미에 법무부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문제를 전장으로 삼아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상임위원회로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인한 '북풍'이 휘몰아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가 첫 손에 꼽힌다. 외통위의 경우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요트 출국' 논란이 돌발 악재로 부상했다. 국방위는 추미에 법무부장관 아들 병역 문제에 공무원 피살까지 겹치며 일대 전쟁터가 펼쳐질 전망이다. 이미 추 장관 아들 서모씨를 비롯한 관련자들과, 피살 공무원 친형 이래진 씨를 증인으로 부르자는 국민의힘과 새누리당이 벌이는 '거짓 답변'에 대한 야당의 용단폭격이 예상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도 전통적인 격전지 중의 하나다. 올해는 공무원 사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빗대며 추궁하는 야당의 공격과 여당의 방어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위원회에선 코로나 등 대외 위기에 의한 확장재정으로 우려가 높아지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지난 5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이내, 통합재정수지 적자 3%이내를 골자로한 재정중립도 입방안을 발표했지만 찬반 양측 모두 혹평한 상태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지난 추석 연휴간 개천절 광화문 보수집회를 차벽으로 전면 봉쇄한 경찰 대응과 광복절 집회의 코로나 재확산 책임론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공방이 점쳐진다. 보수단체가 한글날(9일)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바로 전날인 8일 경찰청 국감이 열릴 예정이다. 정무위원회 국감의 뜨거운 감자는 사모펀드 논란이다.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 펀드 등 사모펀드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증권사의 불안전 판매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많다. 공정경제3법도 화두다. 재

계가 난색을 표하는 공정경제3법 중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2법은 정무위 소관인 탓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부동산 폭등 사태와 관련해 정부 '정책실패'에 대한 여야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21대 국회 시작부터 여당이 밀어붙인 임대차3법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 보안요원 정규직 전



김태년 “野, 무혐의 추미에 흠집내려 국감까지 끌고 가”  
“野, 증인 채택 놓고 국감 파행...할 만큼 하지 않았나”  
“국민참여재판, 일반재판보다 항소율 높아...악용 우려”  
해 도입된 제도”라며 “오히려 일반재판보다도 항소율이 높다는 것은 주목할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이 높은 무죄율로 성범죄 사건에서 악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간과해선 안 된다”며 “특히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일은 없어야 하며,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국민의힘, 공무원 피살 관련 “北상대 피살 사건 소송 검토”

### “정부 국민보호 의무 저버려” 유족 “美워비어 재단과 연대”

국민의힘이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국민의힘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소속 하태경·태영호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앞에서 피살 공무원 친형 이래진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 하 의원은 “미국의 오토 워비어 가족은 재판을 통해서 이겼다. 워비어 사례와 유사하게 변호사와 협의하고 있다”며 “북한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는 정부가 응당히 해야 할 국민보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그것과 관련해서도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유엔 측에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북한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행위들에 대해서도 조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국민의힘 하태경, 태영호 의원과 함께 서울 종로구 북한인권사무소에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이 이번 사건에 대해 (사실 지시가) 단속정 경장의 결심이라는 것을 인정했고 문서로서 (우리 정부에) 통지했다”며 “유엔이 이번 사건을 조사할 모든 조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족 측은 미국의 오토 워비어 재단과의 연대도 검토하고 있다. 피살 공무원의 친형 이씨는 전날(5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만남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전

해졌다. 오토 워비어는 북한에 17개월 동안 구금·역류됐다가 본국으로 송환된지 몇새 만에 사망한 미국의 대학생이다. 워비어 유족은 미국이 압류하고 있었던 북한 선박의 매각 대금 일부 등을 바탕으로 남북 피해자를 돕기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이씨는 “(반 총장이) 재단과 연대해서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이나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며 협력의사를 밝혔다.

## 김태년 “野, 무혐의 추미에 흠집내려 국감까지 끌고 가”

### “野, 증인 채택 놓고 국감 파행...할 만큼 하지 않았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추미에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논란과 관련한 야당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 “야당은 대정부질문 등에서 수개월 간 정치공세를 퍼부었는데 그것도 부족해 무혐의로 끝난 상황을 국감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정쟁의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법사 야당은 증인 채택을 놓고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가고 있다. 할 만큼 하지 않았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감은 사실에 기초한 정부 비판·견제라는 고유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며 “21대 첫 국감이

허위와 폭로로 얼룩진 막장 국감이나 정쟁국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야당 품속에 원칙과 상식으로 대응하고 가짜뉴스에는 팩트체크로 적극 대응하겠다”며 “민주당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의 진일보한 국감이 되도록 솔선수범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국민참여재판, 일반재판보다 항소율 높아...악용 우려”

### 2008~2019년 성과분석...소병철 “높은 무죄율로 성범죄 악용”

국민참여재판의 판결에 대한 항소율이 일반재판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참여재판과 일반재판의 항소율은 각각 80.3%와 63.5%로 국민참여재판이 16.8%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사항소율을 따로 보면 국민참여재판은 48.6%, 일반재판은 28.6%로 국민참여재판이 20%p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원인으로는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일반재판보다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소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은 본래 사법제도의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

해 도입된 제도”라며 “오히려 일반재판보다도 항소율이 높다는 것은 주목할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이 높은 무죄율로 성범죄 사건에서 악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간과해선 안 된다”며 “특히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일은 없어야 하며,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